



# 주간 통일정세

2013-40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중정부 수립 64주년 맞아 시진핑에 축전(9/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중국 정부 수립 64주년(10월1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명의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장덕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 등은 축전에서 축하의 인사를 하면서 양국의 친선관계 강화를 강조함. 또한, 김 제1위원장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의 역사 발전과 수억만 인민들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지난 60여 년간 중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세인을 놀래우는 커다란 변혁이 이룩됐다"라고 높이 평가함.
- **北노동신문, '감자농사혁명' 15주년 선전(10/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감자농사 혁명' 15주년을 맞아 농업 부문의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날 '당의 감자농사혁명 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북한의 대표적 감자 산지인 양강도 대흥단군이 '과학농법'으로 영농기술을 개선해 자체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함. 그러면서 대흥단군의 생산 경험을 일반화해 식량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인민 생활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당의 요구라고 강조함.
  - 또한 "농업혁명은 곧 농업 과학기술 혁명"이라며 "농업 과학기술 혁명을 다그쳐야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힘.
- **北, 김일성대에 '20대 김정일' 동상 제막(10/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종합대학 설립일(10월 1일)을 맞아 이 대학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대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세웠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통신은 "장군님(김정일)의 동상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 하시던(재학하던)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했다"고 밝힘.
  - 1일 열린 동상 제막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영



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막사를 함.

● **北 김정은, 스키·승마복 견본 점검(10/3,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새로 제작한 스키복과 승마복을 점검한 사실이 2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TV가 2일 오후 내보낸 새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102 2013. 9)'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주민과 청소년들이 입을 승마복과 스키복 견본을 살펴봤음. 그러나, 북한 매체는 지난달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승마복 도안을 보고 "우리 인민들의 요구에 맞고 운동에 편리하게 승마복의 색깔과 형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스키복 견본을 살펴보고 마식령스키장에서 주민들이 스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TV는 전함.

● **北 김정은, 완공 앞둔 평양 아동병원 건설현장 시찰(10/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문수지구의 아동병원 건설현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이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시공 상황과 의료설비의 설치 상태를 점검했다고 전함.
- 여기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홍·마원춘·허환철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최근에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구강병원과 함께 아동병원도 전문병원으로서의 체모를 훌륭히 갖췄다"며 "이 병원은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병원"이라고 말함.

■ **김정은동향**

- 10/4, 김정은 黨 제1비서, '아리랑' 공연 참가자들에게 '감사' 전달 (10.4, 중통·중방)
  - 감사 전달 모임, 10.4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 및 김기남이 '김정은 감사' 전달
- 10/6,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 앞둔 아동병원(연건축면적 3만2,800㎡, 6층) 건설 현장 시찰 및 "옥류아동병원"으로命名(10.6, 중통·중·평방)
  - 장성택(국방부 부위원장), 박춘홍·마원춘·허환철(黨 부부장) 동행



####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종합대학 김정일 동상 제막식, 10.1 김영남(제막사)·박봉주·최룡해·장정남·김기남·최태복 등 참가下 진행(10.2, 중통·중방)
- 김영남, 10.4 만수대의사당에서 美 AP통신사 대표단(단장 : 게리 프루잇)과 담화(10.4, 중통·중방)
  - 美 AP통신사 대표단, 주체사상탑·만수대창작사 참관(10.4, 중통·중방)
- 김일성父자의 태양상(환하게 웃는 모습의 초상화) 모자이크 벽화(불패의 일심단결 천만년 영원하리) 준공식, 10.6 리일환(평양시당 위 비서) 등 참가 下 진행(10.6, 중통)

#### 나. 경제

##### ● 北 8월 중국산 곡물 수입 전월대비 16.5%↑(10/1, 연합뉴스)

- 지난 8월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이 7월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중 교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8월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쌀, 옥수수 등 곡물량은 2만6천804t으로 전달 2만2천988t보다 16.5% 늘었음.
- 이로써 북한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 중국에서 2만t 이상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8월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액은 1천 543만 8천 달러(약 165억 원)로 올해 들어 월간 최고 수준임.

##### ● "북한 올해 대풍년...식량난 나아질 듯"(10/1, 연합뉴스)

- 올해 북한에 보기 드문 풍년이 들어 만성적인 식량난이 다소 완화될 것 이란 관측이 나왔다고 1일 여러 매체를 인용해서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농업 사정에 밝은 중국 내 소식통은 1일 "올해 북한에 큰 풍년이 들어 곡물 생산량이 최대 53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북한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지만 예년에 비해 태풍과 같은 큰 자연 재해가 없어 곡물 작황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전함.
- 이 같은 전망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산한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 492만t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이고 이들 국제기구가 추정하는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 540여만t에 근접한 수치임.

#### 다. 군사

##### ● "북한, 올 3월 총련에 전쟁대비 지시"(10/3, 요미우리 등)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올 3월 북한 당국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에 전쟁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요



미우리 신문이 3일 보도함.

- 일본 공안당국에 따르면 허종만 총련의장은 지난 3월 25일 총련 간부회의에서 "김정은 원수가 만일의 경우 전면전쟁에 돌입할 것을 명령하였고, 활동기들은 조국호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조국 통일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연설함.

#### 라. 사회·문화

##### ● 北서 재입북 탈북자 또 죄담회... "南은 암흑사회" (9/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재입북자들이 죄담회에 나와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한국으로 끌려갔었다며 한국을 '암흑사회'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책동에 의해 남조선에 끌려갔다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주민들"과의 죄담회가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진행됐다고 하며 이들의 발언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죄담회에 나온 박진근(49)씨와 장광철(33)씨는 각각 2011년 10월과 지난해 3월 한국에 들어와 살다가 지난 7월과 최근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밝힘. 장 씨는 "지금 공화국의 북부 국경 일대에는 인신매매 거간꾼들이 수많이 돌아치며 우리 주민들을 노리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각성된 우리 주민들이 저들의 유인납치 행위에 잘 걸려들지 않자 먹잇감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함.

##### ● 北, 대규모 매스게임 '아리랑' 공연 폐막(10/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이 폐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전함.
- 방송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돌을 맞아 7월 22일 개막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9월 30일 폐막했다"라며 이 기간 130여만 명의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힘.
- 이어 "공연은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기상과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다"며 "아리랑 공연은 태양민족(북한을 뜻함)의 국보로, 인류 문화사의 대걸작으로 길이 빛날 것"이라고 주장함.

##### ● 北서 '노인의 날' 기념 체육·문화행사 잇달아(10/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국제노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노인의 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유희경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평양에서 구역별로 노인들의 배구와 장기, 윷놀이, 낚시경기가 열리고 있다고 밝힘.



- **北, 세계대회 우승 태권도선수단 표창(10/1, 조선중앙통신)**

  - 북한당국이 지난 7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와 감독, 관계자들을 표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이번 대회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개최한 대회로, 80개 국가에서 1천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ITF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 국제대회와는 별개로 보통 2년에 한 번 씩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함.
  - 통신은 이번에 북한 선수들이 우승컵 4개와 금메달 2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따 국가별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으며, 이날 열린 표창식에서 선수단 감독 김성국은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조선태권도위원회 국장 함철국과 황해북도 태권도선수단 선수 리명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표창장을 받았음.
  
- **北, 리모델링한 평양체육관 개관(10/3,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현대적으로 개보수된 평양체육관이 3일 개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개관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위간부와 건설자, 체육성 간부, 평양시민들이 참석함. 박봉주 총리는 개관사에서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이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평양에 체육인 전용아파트 건설(10/3, 조선중앙통신)**

  - 체육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북한이 체육인을 위한 전용주택을 건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함.
  - 통신은 이날 평양 보통강 기슭에 '체육인 살림집(주택)이 건설돼 입주 시작됐다고 보도함. 또한, 체육인 아파트는 가정용품과 고급가구를 일식으로 갖췄으며 진료소와 식당, 세탁소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됐다고 통신이 전함.
  - 또한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체육인 아파트의 입사증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밝힘.
  
-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10/4,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또다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4일 전함.
  - FAO는 3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0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국가 중에 포함했으며 지난 7월 보고서 발표 때와 비교해 북한의 식량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 '평양 공화국' 북한서 지방 행사 줄이어...왜?(10/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는 그동안 '평양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 평양에 대한 집중현상이 심했으나 지방도시에서 최근 스포츠,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 C급 감독교육이 진행됐다고 강원도 내 축구감독과 지도교원들이 이론과 실무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개함.
- 통신은 북한이 축구기술에 강습 행사를 평양에서 지방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개건된 '평양체육관' 개관식, 10.3 박봉주(내각총리, 개관사)등 참가  
下 진행(10.3, 중통·중방)
- 박봉주,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광범기, 문경덕, 로두철, 김용진, 김인식(내각 부총리), 리용수, 리종무(체육상), 오금철(군사장) 등 참가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北, 일본인 '성묘 방북' 중단 시사"(10/1, RFA; NHK)

- 북한 당국이 북한에 매장된 일본인 유족들의 방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1일 보도함.
- 일본인 유족들의 방북에 동행한 NHK 방송은 북한 당국자가 "일본인 매장지에 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유족들의 방북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함. 이 당국자는 유족들의 방북이 계속되려면 일본 정부가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을 위한 회담에 나서는 한편 일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유골을 북한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덧붙였다.

● 北 통신 "日 '총독정치' 최악 청산해야"(10/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제의 '총독정치' 실시 103주년을 맞아 1일 일본에 과거청산을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총독정치의 최악은 반드시 결산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910년 8월 강도적인 방법으로 불법, 비법의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부터 조선민족 멸살을 노린 가장 야만적이고 악랄



- 적인 식민지 폭압 통치에 매달렸다"라고 지적함.
- 또한 "일제가 우리나라를 불법강점하고 낯강도적인 식민지 통치를 강행 실시하면서 저지른 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비난함.
- **北 신문 "북중 친선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10/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일 중국의 정부 수립 64주년을 맞아 북중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민주조선은 이날 '광활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중국인민'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조중(북중)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힘.
    - 이어 "조중친선관계의 공고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긍정적 기여가 된다"며 "앞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 조중친선은 압록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매체 "한미방위조약은 침략정책 산물...폐기해야"(10/1, 민주조선)**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1일 이 조약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며 폐기를 요구함.
    - 신문은 이날 '폐기해야 할 침략적, 매국적인 조약'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해 남조선을 발판으로 전 조선을 정복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또한, 한미 양국이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하는데 대해 "조미, 북남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는 우리에게 대한 모독이고 노골적인 도발이자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함.
  - **북한, 중국서 애니메이션 활용해 자국 홍보(10/2, 중국신문사)**
    -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 애니메이션 박람회에 참가해 자국 이미지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2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외전람총국은 지난달 29일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에서 개막한 '제8회 중국·스자좡 국제 애니메이션 박람회'에 조선예술평화제작소와 조선중앙미술창작사 등이 제작한 극장·TV용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출품함.
    - 이종식 북한 대외전람총국 주(駐)중국 대표는 "우리는 매우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삼국연'을 비롯한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창작했다"고 소개함.
  - **"北서 크리스마스 보내는 관광상품 등장"(10/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외국인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관광 상품이 처음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대동여행사'는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관광 상품에 대해 "크리스마스를 북한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북한은 매년 겨울철에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했지만 올해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관광 시기와 장소를 확대하고 있다고 RFA는 평함.

● **北서 중학생 러시아어 경연...러 대사 축하연(10/3,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중학생 러시아어 경연이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렸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평양외국어대학 러시아어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연은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65주년(10월 12일)을 기념한 행사로, 평양시내의 제1중학교와 각 지 외국어학원들에서 선발된 학생 30여 명이 참가함.
- 참가 학생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역사, 지리, 풍습, 문화, 상식 등을 주제로 글짓기와 웅변, 듣기실력을 선보임. 폐막식이 3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있었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러시아대사가 축하연회를 열었음.

● **北 신문 "日 '적극적 평화주의'는 해외침략론"(10/4,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들이 최근 국제안보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 기만적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평화 간판을 들고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반동들이 떠드는 '적극적 평화주의' 타령은 곧 뒤집어 놓은 적극적인 해외침략론"이라고 주장함.

● **北김영남 "미국이 적대정책 포기할 때 경제발전 가능"(10/4,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평양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위원장은 게리 프루이트 AP통신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목표는 경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함.
- 김 위원장은 그러나 경제 발전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평화로운 환경을 원한다. 한반도 평화가 보장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설명함.

● **北 신문, 북중수교 64주년 맞아 양국관계 강화 재천명(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북중 외교관계 수립 64주년을 맞아 양국 친선관계 강화, 발전 의지를 거듭 천명함.
- 신문은 '친선관계 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60여 년간 조중(북중) 두 나라는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호상 긴밀히 지지협조하면서 친선의 유대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고 자평함.

- 또한 양국은 "피로써 맺은 친선" 관계로 "전우보다 더 굳건하고 공고한 관계는 없다"며 "이런 특별한 관계로 이어졌기에 두 나라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임.

#### ■ 기타 (대외 일반)

- 北 대표 단장, 9.27 유엔 '비동맹국가 상급회의' 연설에서 '평화와 안정 수호 노력 지속' 및 '6.15·10.4선언 기치높이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 강조(9.29, 중방·중통)
- 美 정부의 '비핵세계' 구상은 "핵우위에 의한 세계제패 야망실현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병풍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실질적인 핵무기 철폐 용단" 주장(9.29, 중통·민주조선·평방/눈감고 아웅 하는 격의 '비핵세계' 타령)
- 김영남, 9.30 '中-朝 우호협회 대표단'(단장: 우동허(武東和) 회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9.30, 중통·중방)
- 박길연(외무성 부상) 北대표 단장, 10.1 유엔 총회 제68차 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유엔군사령부를 군사적 전략실현 이용 및 적대시정책 청산' 등 강조(10.3, 중통)

#### 나. 6자회담(북핵)

##### ● "北 영변 원자로 온배수 방출...재가동 증거"(10/3, 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MW급 가스 흑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됐다고 미국 연구소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19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배수관에서 온배수(hot waste water)가 배출되는 것이 목격됐다고 설명함.
- 38노스의 대북 분석가인 닉 한센은 지난여름 새로 완공된 제2의 냉각 시설의 한 부품으로, 최근 설치된 배수관을 통해 이 뜨거운 폐수가 인근 구룡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온배수 방출은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전기 발전기로 돌아가는 터빈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함.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 北, 류길재 장관 발언 또 비난…"정치적 도발"(10/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극단적 대결관이 낳은 망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최근 경남대 특강에서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는 것처럼 북한을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동족과의 대화 마당을 '체제변화, 제도전복' 야망 실현을 위한 대결공간으로 악용해온 저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대결 속심(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 낚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류 장관이 지난달 25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음. 또한, 신문은 이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약한 나발"이라며 "북남관계의 앞길에 계속 그늘을 던진다면 북남관계는 그야말로 완전 파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위협함.

##### ● 北, 국군의 날 기념행사 비난…"대결광대극"(10/2, 노동신문)

- 북한은 2일 우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최신무기를 공개한 기념행사를 한 데 대해 "대결광대극"이라고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이날 남한이 국군의 날에 병력 1만1천여 명과 군사장비 190여 대, 전투기 120여 대를 동원해 호전적 광기를 부렸으며 "이번 행사 높음은 미국 상전과 군사적 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동족대결과 북침열을 고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고 주장함.

##### ● 北조평통, 차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비난(종합)(10/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변화'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가 우리의 핵문제를 떠드는 것은 미국과 야합해 우리를 무장해제해 북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발"이며 "변화를 운운하는 것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해 보려는 해괴한 망언"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오늘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규탄받아야 할 당사자는 미국과 괴뢰패당이며 변해야 할 대상은 현 남조선 당국"이라면서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적 언행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선임자 이명박 역도와 같은 수치스러운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南단체 '북한인권백서' 비난(10/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일 남한 민간단체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북한 인권에 관한 백서를 '존엄과 체제'에 대한 모독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 패당이 벌려놓은 '2013 북인권백서' 발간놀음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또 "그 무슨 '인권침해'니 뭐니 하는 '북인권백서'라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범죄자, 인간 추물들이 몇 푼의 돈을 위해 늘어놓는 모략과 날조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6·15실천 남·북·해외위 "공동선언 이행" 촉구 중문(10/3,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6주년을 하루 앞둔 3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3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에서 10·4선언을 민족사적 사변으로 평가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이행하는 것을 조국통일실현의 근본문제로 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조평통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체제대결각본"(10/3,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우리 정부가 지난 달 마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체제대결의 각본이라고 비난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밝힘.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10·4선언에 명시된 내용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전면거부하고 반공화국 대결과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를 압박해보려는 철저한 반통일 문서, 체제대결 각본"이라고 주장함.

● **北 10·4선언 6주년 맞아 "反통일세력 도전 물리치자"(10/4, 노동신문 등)**

- 북한은 10·4 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4일 각종 매체를 통해 '10·4선언'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이정표"라며 이를 기치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자고 강조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이정표"라며 "10·4선언은 김정일 동지의 애국 헌신과 노고에 의해 마련된 결실"이라고 주장함. 또한, 신문은 "10·4선언 채택 이후 지난 6년간은 북남선언들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했다"라며 남북 간 다양한 대화와 협력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으로 좌절을 겪고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함.

● **北국방위, 차대통령 실명비난…"핵명진노선 변함없다"(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아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이 전함.
- 대변인은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가 정한 목표를 따라 우리식대로 세계가 부러워하게 강성한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굳게 틀어쥐고 변함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바 '병진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함.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세상만사를 똑바로 가려보고 격에 맞게 입을 놀려야 할 것이다", "유신의 길, 독재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박근혜의 정치" 등의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함.

● **北, 한미일 해상훈련 비난…"핵전쟁책동에 강력대응"(10/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연합해상훈련에 핵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것은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정세를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는 대화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있다"며 "우리는 대화와 전쟁에 다같이 준비되어 있으며 내외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 책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 대결과 긴장격화의 장본인은 미국과 결탁하여 동족대결에 기승을 부리는 괴뢰 보수패당"이라며 "미국과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연습소동은 수습하기 어려운 파국적 사태를 빚어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조평통도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10/5, 연합뉴스)**

- 조평통 대변인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방위 성명을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는 괴뢰 패당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고 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응당한 경고"라며 "박근혜와 그 일당이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의 비판과 경고를 새겨듣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변인은 특히 통일부가 대변인 성명으로 '예의'를 언급해 비난한 것에 대해 "상대방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온갖 험담으로 중상모독 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 것이 예의 있고 품격있는 언행인가"라며 맞받아 비난함.

● 北 신문 "南 집권세력, 유신독재 부활 책동 중단해야"(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한국의 집권세력이 진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등 유신 독재 부활을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되살아난 유신 독재의 망령'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현 집권 세력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들"이라며 이들이 "진보세력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 파쇼적 폭압의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함.
- 또 박근혜 대통령을 '현 괴뢰 집권자'라고 지칭하며 "과거 군부 독재 시대의 죄악을 공공연히 찬미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민주와 정의를 향한 역사 발전의 흐름을 되돌려 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라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대변인, 9.29 중통기자 문답을 통해 남한의 '北 붕괴 가능성' 거론(아산정책연구원 전문가 회의 등)은 "체제 모독, 허망한 꾀변"이라며 '北 최고 존엄·체제 비방 중상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 위협(9.29, 중통·중방·평방)
- 10.4선언 채택 발표 6주년 즈음 '10.4선언은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실천강령'이라며 '6.15·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이 남북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이라고 주장(9.30, 중통·노동신문/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실천강령)
-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대답(10.2),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10.1, 북 핵문제 및 변화 등)에 대해 "우리(北)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고 우리의 대화 평화노력에 정면도전"이라고 비난(10.2, 중통·중방)
- 남조선 당국자가 우리의 핵문제를 떠드는 것은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무장해제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발임.
  - 우리에게 대해 '변화'를 운운한 것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해괴한 망언임.
  - '국군의 날' 기념행사(최신무기 공개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군사적 공모결탁 강화, 동족대결과 북침열을 고취하기 위한 대결광대극'으로 비난(10.2, 중통·노동신문·평방/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
- 「6.15선언실천 북측추진위원회」 등(「민화협」·「범민련」 북측본부), 10.2 연합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출로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이라며 南 정부의 '원칙론' 비난과 '6.15·10.4선언 이행투쟁' 천명 등 '10.4선언 발표 6주년 입장' 표명(10.2, 중통·중방)



- 【중통사 논평】 대통령의 對北발언들(국군의 날 기념사, 韓美동맹 60년 기념사, 신뢰프로세스 등) 관련 "괴뢰패당의 동족대결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일대 광란극"이라고 지속 비난하며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10.3, 중통/대결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반공화국 광란극)
- 【조평통 대변인 담화(10.3)】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 확정 관련 '남북선언들의 이행을 전면 거부하고 반공화국대결과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北)를 압박해 보려는 철저한 반통일문서, 체제대결 각본'이라고 비난(10.3, 중통·중방·평방)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44호(10.3)】 1995년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 참배혐의자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한 새누리당 최소요구 등 발언 관련 "반민족적, 반인륜적 추태가 아닐 수 없다"며 '무죄선언은 지극히 응당한 판결로서 가소로운 소동을 즉시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0.3, 중통·중방)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10.5), 통일부 대변인 對北성명(10.4,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에 대한 초보적 예의 등 발언)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응당한 경고를 똑바로 새겨듣고 부질없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박○○ 일당은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再次 실명 비난(10.5, 중통·평방)
  - 통일부 대변인 對北성명(9.21, 北 이산가족상봉 연기 관련)과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언론들의 對北 보도('北 붕괴가능성') 등을 지속 거론하며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라고 책임 전가 비난(10.5, 중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위성사진,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 증거>(10/3, WSJ)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지난달 1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원자로에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사용하는 온배수(溫排水)의 배출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 이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MW급 가스 흑연 원자로가 재가동 중이라는 증거라고 말했으며, 한미연구소는 앞서 북한이 새로운 지하 냉각시설을 지난여름 완공했다고 밝힌바 있음.

##### ● <비핵화팬 北과 불가침 조약 언급...美 기류 변화?>(10/4,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대화와 협상할 준비가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정권을 교체 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메시지와 톤이 달라졌거나 달라질 개연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북핵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불가침 조약과 같은 확실한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압박하는 쪽으로 전술적 태도를 바꿨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음.

##### ● <北김영남 "미국이 적대정책 포기할 때 경제발전 가능">(10/4,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게리 프루잇 AP통신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목표는 경제 성장이며, 이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미국과 나쁜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며, 북미관계의 공이 워싱턴에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그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남한 당국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새로운 대결 구도의 악순환으





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음.

● <미 연구소 '북한 핵기술 수출 가능성 늘어'(10/4, VOA)>

-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불법 판매할 수 있는 국제연결망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가 현재 외화난을 겪고 있어 핵 밀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 보고서는 또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핵 협력으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실험과 핵탄두 탑재 기술이 고스란히 이란에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음.
-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과 유럽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독자적, 지역적 차원의 금융제재를 계속 확대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이란과의 모든 주요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의 불법 밀매 금지와 결의, 이를 검증하는 조건이 담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북한대표 "미국,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조성"(10/2, 연합뉴스)>

-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 장악을 목표로 북한을 첫 번째 공격목표로 삼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권한을 악용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더불어 핵 군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면서 핵무기 사용 금지를 규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문서들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북한의 자주권인정, 평화협정체결, 남한 내 유엔사령부 해체, 대 북한제재 조치 중단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음.

● <런던 세미나 '美전문가 "북 6자회담 복귀의향 확인"'(10/3, 연합뉴스)>

-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은 이틀 일정의 비공식 세미나를 가졌음.
-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이날 런던 아테네움 호텔에서 이틀간의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향이 확실하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北 8월 중국산 곡물 수입 전월대비 16.5%↑>(10/1, 연합뉴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중 교역동향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8월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2만6천804톤으로 전달 2만2천988톤보다 16.5%늘었으며, 곡물수입액은 1천543만8천 달러(약 165억 원)로 올해 들어 월간 최고 수준이라고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이 어느 해보다 중국산 곡물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며 "올해 가을 작황은 작년보다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내 곡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 일·북 관계

- <北 신문 "日 '적극적 평화주의'는 해외침략론">(10/4,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들이 최근 국제안보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 이날 '평화 간판을 들고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적극적인 해외침략론이라고 비난했음.
  - 이어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19세기 후반 식민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된 '동양평화보장'구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평화를 이유로 자위대 활동을 넓히는 것은 위험하며, 일본은 전범국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 기 타

- <北, "김정은 11개 시도에 경제특구 개발 지시"...외자유치 총력>(10/4, 교도통신)
  - 4일자 교도통신은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전국의 9개 도와 평양, 남포 2개 도시에서 경제개발의 거점이 되는 특구를 하나씩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함.
  - 관광특구로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동부의 원산 등이 신설 특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의 투자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속에서 특구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신설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인사들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경제 세미나에서 이런 특구 구상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헤이글 미 국방장관 DMZ방문 "한미 동맹 과시">(9/30, VOA)
  - 취임 이후 처음으로 3박 4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30일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음.
  - 이어 그는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JSA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방문의 목적을 밝혔음.
  - 국방부는 헤이글 장관의 최진방 방문에 대해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 인만큼 동맹상황을 돌아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음.
- <한미, 실무적 차원에서 전작권 재연기 '공감대'>(9/30, 연합뉴스)
  - 한미 군 당국은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는 실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이 가시적인 위협이라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점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30일 군의 한 소식통이 밝혔음.
  - SCM에 앞서 서울에서는 마틴 템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정승조 한국 합참의장이 제38차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나,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재연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무차원의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앞서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미, 전작권 재연기 공감...내년 상반기 최종결정>(10/2,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연기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이 가시적인 위협이라는 평가에 기초해 내년 상반기 중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했음.
  - 양국 국방장관은 SCM공동성명에서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중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언제까지 구축되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한미, '북핵WMD 선제대응 전략' 협의>(10/2, Reuters)
  - 한국과 미국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에 서명했음.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왔으며, 세 번의 핵실험을 강행한바 있다. 북한은 우리 스스로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맞춤형 억제전략'이 최근 북핵 위협으로 인해 추진되었음을 밝혔음.
- 한편,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작권 환수시기를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한국 TPP참가 '가시화'...쟁점과 향후 전망은>(10/4, 연합뉴스)

-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가할 가능성이 큰 쪽으로 기류가 잡히면서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음.
- 정부가 TPP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지난 3월 일본이 협상 참가를 공식 선언한 후,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TPP가 체결될 경우 역내 무역 주도권 박탈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美, 연료봉 건식 보관 최신 기술 한국에 이전>(10/4, KBS뉴스)

-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사용후 연료봉을 건식으로 보관하는 최신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줄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사용후 연료봉 처리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며, 재처리를 둘러싼 한미간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음.
- 건식보관기술, 드라이캐스크 저장방식은 수명이 60년 정도이고 안정성이 높고, 관리비용이 들지 않아 수저보관 방식보다 경제적이라고 평가됨.

● <아인혼 "한국에 재처리·농축허용시 비확산목표 손상">(10/4, 연합뉴스)

- 지난 2일 개인 자격으로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4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후속 협정에 재처리와 농축에 대한 사전 동의가 포함되면 그것은 우리의 비확산 목표를 손상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미국이 재처리·농축 사전동의를 결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이 추가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면 외국의 우리나라 농축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 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접근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 <韓, 對中 전략 수위조절 고심>(10/4, 문화일보)

- 정부는 중국이 4일 '미·일안정보장협의위원회(2+2)' 협의 결과에 " (미·일)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강력 반발함에 따라 이 같은 중국의 태도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음.



- 중국의 반발에 따라 중국 내 한·미 동맹 우려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이 미·중 간 패권다툼에 시달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정부가 경제관계나 대북정책공조 등에서 중국과 공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대중경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미사일방어(MD) 편입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 등에 대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중국 때문으로 판단됨.

#### 다. 한·일 관계

- <정부, 내달 유엔서 아베 '여성인권'발언 우회비판>(9/30, 연합뉴스)
  - 지난 26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분쟁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엔 제 3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도 높게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올해는 발언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 대표 급을 유엔 차석 대사에서 유엔 대사나 외교부 본부 간보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발언 내용과 수위는 발언 때까지의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함.
- <과거사 문제에 쐬기...연내 한일정상회담 불발 관측>(10/1, 연합뉴스)
  -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영토 문제에서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정부가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 요구를 재차 밝히면서 연내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중일간 관계 악화 문제도 겹쳐 아세안정상회의(9~10일)를 계기로 관례적으로 열렸던 한중일 3국 간 정상회담도 불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취임 2~4개월째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으로 미루어, 대통령 취임 첫해에 한일정상회담의 불발은 이례적인 일로 판단될 것임.
  - 내년 상반기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확한 시기와 관련해 이달 17~20일 열리는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가 한일 관계에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한국이 역사문제 노력 이해 안 해줘서 유감">(10/2,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영토 문제를 두고 일본 지도자를 비판한 것에 관해 1일 "일본은 지금도 역사 문제 등에 관해 제대로 대응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을 해 오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며, 대국적 견지에서 한일 양국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언급하며, 이어 "먼저 일본이 제대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한편, 그는 이달 7~8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한일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라. 미·중 관계

### ● <“중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발표, 중대한 진전”>(9/29, NYT)

- NYT는 중국 정부가 최근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의 반대에도 핵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중국의 반대에도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발표는 중국의 강화된 분노의 표시이며,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 ● <中, '셋다운'오바마 빈틈 노려 동남아 외교공세 강화>(10/4,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리커창 총리가 오는 9~15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제16차 '아세안+3'(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국은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의 패권경쟁 본격화에 대비, 아세안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동남아 외교 공세 강화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셋다운'으로 APEC 정상회의를 취소한 틈을 이용, 중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이번 순방과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교역 및 투자 등 경제교류 강화방안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합의 비난>(10/4, 연합뉴스)

- 중국은 4일 오후까지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신화통신과 중국망 등의 매체를 통해 양국 간 군사분야 공동보조 강화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쏟아냈음.
-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군사 일체화 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미일 동맹이 갈수록 위험한 길로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본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위대가 적국



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중국땅은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기로 한 것은 중국의 군사 발전에 대한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지적했으며, 심천위성TV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위협론'을 전제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마. 미·일 관계

-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사이버공격 대응' 포함”(9/30,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새롭게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음.
  - 10월 3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무·국방장관 간 '미·일안보장협회의위원회(2+2)'에서 이 같은 방안을 합의한 뒤 국장급 방위협력소위원회에서 향후 1년에 걸쳐 구체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함.
- <라클리어 "안보협력 위한 집단적 자위권 토론 필요">(10/2, 연합뉴스)
  -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3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참석차 서울을 방문 중인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부(PACOM)사령관은 전날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대해 역내 안보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토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 '안보협력'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으나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해석 변경 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됨.
  - 이에 앞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대해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재설정하는 차원이라면 도울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美중합선물세트 받은 아베, 軍事대국화 날개단다>(10/4, 조선일보)
  - 미국과 일본은 3일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보장협회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의 경비 강화를 위해 P8초계기,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첨단무기를 배치를 합의한다는 내용과 일본의 '평화헌법'의 집단적 자위권 제한을 사



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표현까지 포함되었음.

-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일 동맹 대폭 강화를 합의한 배경에는 장기화되는 미국의 재정난과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됨.

#### 바. 중·일 관계

##### ● <中 해경선 4척, 국경절 맞아 센카쿠 해역 진입>(10/1, 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 4척이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인 1일, 오전 9시 경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했다고 일본 해경이 밝혔음.
- 또한,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프로펠러 항공기인 Y-12도 센카쿠 열도에서 10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가 일본 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출동해 저지에 나서자 기수를 돌렸음.
- 관측통들은 중국이 '마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앞두고 센카쿠 해역에 해경선을 진입시킨 것과 관련해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더 이상 실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음.

##### ● <시진핑-아베 APEC서도 냉랭한 분위기 연출 예고>(10/2, 연합뉴스)

-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 기간에 센카쿠 문제 등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회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날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음.
- 이와 더불어, 아베 총리가 최근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강경발언을 한 사실이 중국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센카쿠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일 양국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가 APEC무대에서도 연출될 것으로 전망됨.

#### 사. 일·러 관계

##### ● <“일·러, 이르면 2017년 북극해 항로 개설”>(10/2, 연합뉴스)

- 2일자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과 러시아 정부는 북극해를 경유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북극해 항로에 이르면 2017년 상선을 본격 운항시키는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이 북극해 항로가 수에즈 경유 항로보다 거리가 약 60% 짧고 항해시간도 2주간 단축돼 기업의 수송비용 절감 외에도 중동정세 긴박시의 대체 루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에너지 공급선도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러시아도 북시베리아·야말반도 앞바다에서 개발 중인 가스전의 수출 루트를 확보하게 됨.
- 신문은 양국의 북극해 항로 개설은 중국이 북극해 진출에 나선 것과 관련, 일본과 러시아가 공조체제를 갖추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 아. 기 타

- <日국가안보전략에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 명기>(10/1, 연합뉴스)
  - 1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신조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연말 발표할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함.
  -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구상으로,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초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음.
  - 궁극적으로는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에 씌워진 '전후체제'의 명을 벗김으로써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목표로 보임.
- <러시아 푸틴 집권 후 군비 급증...군사대국으로 부활>(10/2, 연합뉴스)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러시아, 무기로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의 올해 군사비 지출 규모는 68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5%증가한 규모이며, 영국과 일본을 능가해, 미국(6천378억 달러)과 중국(1천317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음.
  - FT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 증가에는 군사력을 부활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체첸과의 전쟁 등 과거 20년 동안 추락한 러시아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음.
  - 아울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재군비 프로그램을 러시아 군대를 미국이나 영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군대'로 전환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보고 있음.
- <한·러 국회, 협력협정 체결...의회 간 교류 확대키로>(10/3,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 상원 회의실에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의장과 함께 양국 국회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상원과 대한민국 국회 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음.
  - 회담에서 마트비옌코 의장은 "러시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3번째로 중요한 무역파트너지만 투자활동이나 무역량은, 양국 잠재력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말했으며, 한러 양국 의장은 양국 간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음.
  - 강 의장은 오는 11월 한러정상회담에서 한러 현안이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